

지방자치·종합

광주서 민간차원 대북교류 물꼬 트나

수해지역 지원 위해 광주시의원 전원 방북 추진

전국 광역의회 중 처음으로 광주시의회 의원 26명 전 의원이 북한 수해 지원을 위해 방북을 추진키로 해 주거주가 주목된다. 광주시의원들의 방북이 이뤄질 경우 2008년 이후 사실상 중단된 광주지역 통일관련 단체 등 민간단체 차원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사업이 금물살을 탈것으로 전망된다.

광주시의회는 6일 “북한 수해지역에 쌀과 의약품을 전달하기 위해 이번 주 중 시의원 전원이 통일부에 방북을 신청키로 했다”고 밝혔다.

자립형 사립고 모집요강 위원 논란

광주시의회 정희곤 교육위원장은 6일 “현행 자율형 사립고 신입생 응시 제한은 위헌”이라며 “이르면 이번 주 중 헌법소원과 함께 신입생 모집정지 거쳐분 신청을 제기하겠는”라고 밝혔다.

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“자율형 사립고 신입생 모집요강에서 상위성적 30% 이내 학생들에게만 지원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교육부 요인인 학생들의 학교선택권과 교육평등권을 침해한다”며 “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에 대해 법률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위

시의회는 방북 신청에 앞서 8일 통일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.

시의회는 방북 일정은 다음달 5~7일 2박3일 간의 일정으로 추진되며, 수해가 가장 심한 지역을 방문해 북한 주민들에게 쌀과 의약품을 전달할 예정이다.